

추미에 강공에 이재용 불기소까지 윤석열 리더십 '휘청'

추 장관 "저 하나 희생당하는 건 안 두려워" 사즉생 각오

심의위 "수사 문제있다" 결론... '검언유착' 내부마찰 커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법 때부터 공을 들였던 삼성 관련 수사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로 암초에 부딪혔다.

여기에 추미에 법무부장관이 "법 기술을 부린다" "지시를 잘만 잘라먹었다" 등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정치권의 사퇴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리더십 예도 타격이 불가피해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심의위는 약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의 의결은 '읽고'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반해 기소를 강행하면 앞선 8차례와 달리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선례가 된다. 기소하거나 기소 뒤 공소유지를 하는 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줄곧 불거졌던 법무부와 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조사를 대검찰청이 검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전 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윤 총장을 비판했다.

또 "검찰총장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시를 어기고,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을) 대검 검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냈다"며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서 보라고 제 지시를 잘만 잘라먹었다"고 수위를 높였다.

전날(27일)에는 정치권에서 추 장관의 발언과 지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페이스북에 보다 강경한 어조로 공세를 이어갔다.

추 장관은 "검언이 처음에 합세해 유사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며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냐"며 언론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 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 강연을 두고 '콘대 스타일'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쪽쪽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한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추 장관은 특히 "이것이 개혁이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며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 바로 보아야 할 때"라며 '사즉생'의 각오까지 밝혔다.

법무부와 의 마찰과 정치권의 공세 등 의적 상황과 더불어 검찰 내부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것도 윤 총장 리더십이 흔들리는 위험 요소다. 지난 19일 구분선 차장이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 A 이모 기자 측이 낸 자문단 소집 진정이 논의됐다.

부장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으나 윤 총장은 자문단 회부 결정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부장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자문단 회부여부는 부장회의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단 자문단 소집은 결정됐으나 안건과 구성 과정, 자문단이 내놓을 결과를 두고 대검과 수사팀이 의견대립을 보일 가능성이 짙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자문단 소집결정을 언론보도 전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팀 결정 이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만을 냈다.

최이슬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

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정승호 기자

'최일선 사투' 의료진 제대로 대우는 언제쯤

감염병 대응 국가유공자 포함 법안 발의... 의협 "환영"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우리 의료진이 처음으로 희생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4월의 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감염병과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제 몸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되고(故) 허영구 원장이 사망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이 글을 올려 안식을 기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고 허 원장의 유가족에게 위로 전화를 걸었고, 경산시는 고 허 원장의 유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의료계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관련 협회는 '간호법 제정' 등을 21대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움직임에 나섰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 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 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 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코로나19의 제2차 대응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급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한다"며 "법정부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으로 코로나19 현장을 겪은 최연숙 의원(국민의당)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보건 의료인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보건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오유나 기자

"대기업 회장 가족"... '친척 사칭' 수억 갈취 60대 '징역'

1심 사기범에 징역 1년8월...공범엔 징역1년2월

대기업 회장의 친척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범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1년2월을, 대기업 회장의 이름을 사칭한 B씨(69)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한 다방에서 사업가 C씨에게 "300여원의 잔고증명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 "B씨가 대기업 회장의 친척이니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법으로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이름이 비슷할 뿐 대기업 회장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며, 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과 피해규모를 비취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을 포함해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47조 1항(사기죄)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항소했다.

신봉우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